

4/ 천황제와 성차별 · 이성애주의의 재생산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의 증언을 향해*

호리에 유리



『끝내자 천황제: 2016 → 2020 '황위 계승' 반대행동 기록』(終わりにしよう天皇制:
2016 → 2020「代替わり」反対行動の記録) 표지

출처: <끝내자 천황제! '황위 계승'에 반대하는 네트워크> <http://han.ten-no.net/?p=862>.

호리에 유리(堀江有里) 현재 공익재단법인 세계인권문제센터의 전임 연구원이며 일본 기독교단 목사(교토교구 순회 교사)이다. 1990년부터 성소수자의 상담일을 해 왔다. 연구영역은 사회학, 젠더/섹슈얼리티 연구, 퀴어신학이다. 도시샤대학 대학원 신학연구과 전기박사과정에서 역사신학을 공부하고, 오사카대학 대학원 인간과학연구과 후기박사과정에서 인간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 『「レズビアン」という生き方: キリスト教の異性愛主義を問う』(新教出版社, 2006), 『レズビアン・アイデンティティーズ』(洛北出版, 2015) 등이 있고, 공저로 『하느님과 만남 동성애』(숨프 프로젝트 편, 한울, 2010)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4.30.120>

1. 문제의 소재: 황위 계승 이후

2019년 30년 만에 황위가 계승된 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근대국가 형성을 위해 도입한 근대천황제는 일본사회의 성차별과 이성애주의라는 규범을 재생산하는 장치다. 동시에 종종 외교 장면에서 ‘원수’라는 역할로 등장하는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상징천황제라는 국가체제에 길들여져 이 국가체제를 문제시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천황제라는 시스템이 성차별과 이성애주의의 존립 구조로 존재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미 일본 페미니즘에서는 천황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물론 천황제가 사람들의 의식과 습관, 특히 성 역할 면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천황제 문제를 다룬 젠더연구에서는 특히 여성사와 표상연구가 축적되었다. 먼저 여성사 연구를 보면, 나중에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가노 미키요의 공헌이 크다. 가노는 신분제로 기능하는 천황제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근대화와 남계 남자 황위 계승권이 구축된 과정을 밝혔다.¹ 그리고 스즈키 유코는 근대천황제가 초래한 군대 위안부 문제 등의 성노예 제도와 식민지 지배를 분석하였다. 또한 헤이세이 황위 계승에 주목하면서 전 근대부터 이어져 온 황실 여성들을 시대마다 좇아 규명하고 근대 이후에 새롭게 구축된 문제가 그전 시대와 연관된 점을 밝힌 연구서를 간행했다. 여성사 연구에서는 그 밖에 다른 연구도 있지만, 지금까지 천황제가 제기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차별이나 성역할에 관한 시점은 결여된 면이 크다.²

1 加納実紀代, 『女性と天皇制』, 思想の科学社, 1979; 加納実紀代, 『天皇制とジェンダー』, インパクト出版会, 2002; 加納実紀代, 『「統後史」をあるく』, インパクト出版会, 2018.

2 鈴木裕子, 『天皇制・「慰安婦」・フェミニズム』, インパクト出版会, 2002; 『フェミニズム・天皇制・歴史認識』, インパクト出版会, 2006; 『天皇家の女たち: 古代から現代まで』, 社会評論社, 2019. 그 밖에도 국민국가형성과 근대천황제의 구축을 언급한 예로 하야가와 미키오(早川紀代, 『近代天皇制国家とジェンダー: 成立期のひとつのロジック』, 青木書店, 1998; 『近代天皇制と国民国家: 両性関係を軸とし

에 종사하고 있는 기타무라 사요(北村小夜)는 “70년이 지나도 대일본제국헌법·교육칙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권재민이 몸에 배지 않는” 상황으로 지적하면서 아키히토의 메시지가 ‘헤이세이 인간선언’, ‘헤이세이 옥음(玉音)방송’으로 표현되었다고 지적했다.⁵

결국 2019년 4월 30일에 퇴위례정전의식(退位礼正殿の儀)에 따라 아키히토는 상황이 되었고, 이튿날인 5월 1일에는 새로운 천황이 된 나루히토(徳仁)의 검새등승계의식(剣璽等承継の儀)을 시작으로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이 날부터 연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즉위례정전의식(即位礼正殿の儀, 10월 22일), 다이조사이(大嘗祭, 11월 14~15일)와 같은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검새등승계의식과 즉위례정전의식이 실시된 날은 ‘국민 모두가 축하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공휴일(=국민축일 祝日)로 지정하는 법률까지 제정되었다(2018년 12월 14일 공포).

황위 계승 직전인 2019년 3월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아키히토가 ‘천황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충분히 했다’라는 답변이 67%였고, 이는 ‘어느 정도 했다’라는 19%의 답변과 합하면 87%나 되었다.⁶ 이러한 결과를 보면 상징천황제는 확실하게 일본사회에 정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쇼와’에서 ‘헤이세이’로의 이행(1989)과 비교해서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의 이행(2019)은 생전퇴위에 따른 황위 계승이기 때문에 ‘자숙’과 ‘상중’(喪)에서 ‘축제’로 이어지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명암도 없었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가 더욱 불가시화된 것이다. 게다가 미디어는 일련의 황위 계승 의식을 보도하면서 계속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한 연출 속에서 천황제가 내포한 문제에 대한 표면적인 무관심이 사회적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 무관심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으로, 그러나 이 무관심은 사실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움직이려고 하면 커다란

5 北村小夜, 『慈愛による差別: 象徴天皇制・教育勅語・パラリンピック(新装増補版)』, 梨の木舎, 2020, 208쪽.

6 『毎日新聞』, 2019년 3월 19일.

‘터부’의 압력에 놓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천황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압력은 강해질지언정 수그러질 기색이 없다. 반천황제 데모나 집회주최자에 대해 우익단체가 자동차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폭력행위가 자주 발생하지만, 경찰이 그러한 상황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도 방치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의 과잉 경비나 구체적인 탄압까지 생겨났을 정도다.⁷

이러한 ‘터부’는 사실 일상 곳곳에 숨어 있다. 예를 들면, 신분제도나 성차별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천황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 ‘과격하다’는 꼬리표가 붙거나, 황실 누군가의 이름을 친구처럼 편하게 부르면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는다.⁸

천황제 반대 투쟁을 하는 민중은 이러한 황위 계승 의식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저항의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 글에서는 헤이세이의 황위 계승과 레이와의 황위 계승을 비교하여 각 시대의 분위기를 그려 낸 후에 젠더와 섹슈얼리티 관점에서 일본사회에서 천황제라는 국가체제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 7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친 일련의 황위 계승 의식과 관련한 행사가 실시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저항과 항의를 위한 ‘끝내자 천황제! ‘계승’에 반대하는 네트워크’[오와텐 네트워크(おわたんネットワーク)]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단체의 네트워크가 생겼다(이 그룹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다치가와(立川) 자위대 감시 천막촌이 소유한 화물 견용 승용차가 데모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우익단체가 습격하여 앞 유리가 깨지고 프론트 그릴이 파괴된 일. 그곳에는 기동대와 경찰관이 있었지만, 우익의 습격행위를 막지 않았다(2017년 11월 23일). 또한 550명 정도 참가한 즉위례 반대 데모(2019년 10월 22일)에서 기동대가 데모 참가자 궤전에 대고 큰소리를 치면서 몸을 제압한 후 3명을 불법체포한 일. 이 사건은 나중에 준항고로 인용되지만, 도쿄지방법원은 일단 구류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정치적 탄압사건에서 구류청구 기각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로 체포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건이었다(堀江有里, 『『国家と教会』論・再考: 天皇代替わり時代におけるキリスト教会の責任』, 『人権教育研究』第28号, 2020, 49~74쪽).
- 8 황실 사람들에게는 항상 최고의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전즉위특별법’도 다른 법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구성되었다. 정부나 미디어가 한결같이 특별한 존재로 다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2. 민주주의의 부재: 황위 계승과 일본사회

1) 1988년과 1989년에 걸쳐 생긴 사건

2019년의 황위 계승이 그전 황위 계승(1989)과 크게 달랐던 것은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쇼와의 종언을 잠시 되짚어 보자. 미디어를 비롯해 1988년 중반부터 일본은 6개월 정도 자숙의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당시 교토 고쇼(御所)에 인접한 도시사대학(同志社大学) 학생으로 생활했던 나에게 당시 일은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 캠퍼스에 인접한 교토 고쇼에서는 경관이 계속 순회를 돌았다. 그리고 자주 이용하던 근린 주차장에서는 자동차의 트렁크를 확인했고, 경찰관이 형식적인 질문을 반복했다. “가방 속까지 샅샅이 검사했다”고 말한 동기도 있었다.

자숙과 과도한 경비. 그러한 일이 계속된 것은 쇼와 천황 히로히토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하혈과 수혈을 반복하던 때였다. 해가 바뀌고 히로히토의 죽음이 알려진 것은 1989년 1월 7일이었다. 이튿날 연호는 ‘헤이세이’로 바뀌었고, 자숙의 분위기는 바로 상중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키히토가 새로운 천황이 되면서 새 시대를 맞이한다는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⁹ 1990년 11월 12일에는 즉위례, 그리고 22일부터 23일에 걸쳐 다이조사이¹⁰가 이루어졌다. 특히 자숙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자숙에서 상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강한 동조의 압력이 가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천황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많이 존재했다.

종교학자인 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는 일본사회를 뒤덮고 있는 자숙

9 그러나 황위 계승과 연호의 변경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는 인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위를 계승할 때마다 연호가 바뀌는 근대 이후 천황제는 ‘시대(時)의 지배’를 수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10 다이조사이(大嘗祭)는 교체된 새로운 천황이 그해 곡물을 신에게 바치고 공식(共食)한 후 영(靈)을 이어받는 의식이다. 하룻밤 동안 의식을 거쳐 비로소 천황이 되는 과정이 완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의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다이조사이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것은 현 인신으로 신격화된 메이지 천황의 시기였다(遠藤正敬, 『天皇と戸籍: 「日本」を映す鏡』, 筑摩書房, 2019, 263쪽). 다이조사이의 역사는 小倉慈司·山口輝臣, 『天皇の歴史9: 天皇と宗教』, 講談社學術文庫, 2018 참조.

과 상중의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이상한 상태를 기록해 둘 사명감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천황제는 현대 일본에서도 국민국가의 편성원리로 존재하고, 가장 권위적이고 터부적인 차원을 집약해서 대표하는 존재다. 패전을 경계로 현인신 천황관과 세계지배의 사명과 같은 국체의 특수한 우월성에 대한 광신적이고 망상적인 측면은 쉽게 벗어 던지고, 물질문명과 소비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 천황제는 적응해 왔다.¹¹(강조, 필자)

야스마루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태평양전쟁을 전후로 히로히토의 퍼포먼스에 커다란 전환이 있었다. 태평양전쟁 후에는 현인신(現人神, あらひとがみ)의 역할을 가볍게 벗어 던져 버린 것이다. 자숙과 상중이 뒤덮은 사회의 분위기는 역사의 망각 속에서 연출된 '적응'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일본제국군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전쟁책임은 의도적으로 망각되었다.

그리고 야스마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질서의 망이 둘러쳐져서 천황제는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의례적인 의식 속에서 아무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권위와 중심을 연출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양민(良民)이 아닌, 어딘가 의심스러운 존재로 판정되는 선별=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¹²

이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1990년에 오사카지방법재판소에 제소된 즉위례와 다이조사이에 대해 위헌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1,700명이나 되는 시민이 원고로 참여했다. 국가예산을 사용해서 황위 계승의 신도행사를 실시하

11 安丸良夫, 『近代天皇像の形成』, 岩波学術文庫, 2007[1992], 308쪽.

12 安丸良夫, 『近代天皇像の形成』, 308쪽.

는 것은 일본국헌법에 명기된 정교분리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이었다. 이 소송은 자숙과 상중의 시대와 중첩되는 면도 있어서 천황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환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오사카고등재판소는 즉위례와 다이조사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1995년 3월 9일) 판결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¹³

- ① 즉위·다이조사이로 집행된 모든 의식 중에서 두 개의 의식, ‘다이조사이 의식 전체’ 및 ‘즉위례 중에서 즉위례정전의식’은 비용의 부담 방법과 집행 상황을 보면 정교분리 위반이다(정교분리 위반 / 헌법 20조, 89조 위반).
- ② 즉위례는 국민주권과 호응하지 않는 면이 있다(국민주권원칙 위반 / 전문, 1조 위반).
- ③ 봉축요청은 사상·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사상신조의 자유침해 / 19조, 20조, 21조 위반).¹⁴

노골적으로 신도의식에 방대한 국비를 쏟아붓는 것도, 즉위 의식 개최 일부를 ‘국민축일’이라는 공휴일로 변경하거나, 학교 현장에서는 지역의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국기인 히노마루를 게양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정교분리나 사상 신조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13 菱木政晴, 「宗教としての天皇制を考える」, 『季刊ピープルズ・プラン』 第84号, 2019, 54~61쪽.

14 여기에 기재된 일본국헌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종교의 자유는 누구든 보장한다. 어떤 종교단체도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누구든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이나 행사 참가를 강요받아서 안 된다.

3.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이나 다른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의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2. 열람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89조 공금과 기타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해서, 혹은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않은 자선, 교육 혹은 밖에 사업에 대해 지출하거나, 또는 이용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 그러나 이 판결은 최고재판소에서는 폐기되었고, 2019년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의 황위 계승에서도 신도행사에 대한 국비지출과 봉축요청은 과거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했다.

일본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위헌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황위 계승도 헤이세이 황위 계승 의식을 답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 2019년에 일어난 사건

헤이세이 황위 계승 의식에 대해 오사카최고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의식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2018년에는 즉위례와 다이조사이 위헌금지청구소송[이하 즉대소송(即大訴訟)]이 개시되었다.¹⁵ 원고의 주장은 즉위례와 다이조사이를 비롯한 의식이 ‘주권재민’과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한 헌법을 위반하고, 종교의식에 대한 국비지출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미 진행된 의식의 준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재판은 도쿄지방법판소에서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분리되면서 전자는 구두변론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9년 2월 5일에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판결이 2024년 1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 재판은 설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본정부의 입장이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원고 측 입장에서는 소송자료로 황위 계승만이 아닌, 천황제 사회에서 민중이 입은 손해를 여러 각도에서 밝히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필자도 원고 입장에서 두 번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첫 번째는 법정에서 의견진술을 했다. 현재 소송 중인 재판으로 그 노정을 되짚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특징 중 하나는 천황제가 성차별과 이성애주의의 존립 구조로 존재한다는 점을 법정에서 지적했다. 적어도 헤이세이 황위 계승 의식 때 제

¹⁵ 이후 2019년 3월 31일에 77명의 원고가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기된 소송에서는 그러한 시점이 거의 없었다.

또한 법정투쟁만이 아닌 황위 계승에 관한 일련의 의식에 대해 일본 각 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항의행동으로 전개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룹이 협동 행동을 시작했다. 오와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반대 운동의 기획과 운용을 맡았다. 오와텐 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 일련의 황위 계승 의식과 행사가 실시되는 동안 저항과 항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단체의 네트워크다.¹⁶

오와텐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항의 행동은 필자가 지금까지 고민하던, 혹은 잘 몰랐던 반천황제운동의 이미지를 좋은 의미에서 완전히 전복시킨 것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발언을 여성들이 담당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천황제 문제에 성차별과 이성애주의 문제가 크게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공간이 있었다.

그들이 주최한 항의 행동에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서 기록해 두려고 한다.¹⁷

16 오와텐 네트워크를 만든 집회는 2018년 11월에 열렸다. 처음 집회를 모집한 단체는 야스쿠니와 천황제 문제정보센터,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법제화와 강제에 반대하는 가나가와(神奈川) 모임, 반천황제운동 연락회, 천황제가 필요 없다 데모 실행위원회 4단체이고, 기타 115개의 찬동단체가 있다. (2019년 3월 시점) 필자가 소속한 신앙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모임(ECQA)도 찬동단체로 이름을 내걸고 있고, 회의에도 수차례 참가하면서 논의를 거듭해 왔다. 처음 집회를 모집한 4단체는 2018년 2월부터 새로운 연호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여, 같은 해 12월에 6,803개의 서명을 내각부에 제출했다. 공식 사이트에는 처음 게시하는 행동으로 '8·15 반대 야스쿠니 행동 실행위원회(준)' 명의로 39단체가 연맹하여 천황 아키히토에 대한 항의문(2017년 5월)을 게재했다(<http://han.ten-no.net/>). 이러한 오와텐 네트워크 활동은 2019년 12월 7일 집회와 데모, 2020년 2월 23일 천황탄생일 집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특히 2019년에는 골든위크(Golden Week,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황금 연휴) 때 '반대 천황제 연휴'(反天ウィーク)를 시작으로 매달 집회나 데모를 거듭해 왔다. 우익단체의 방해에 대한 대응이나 나중에 설명할 불법체포에 대응하는 구원회(救援會)의 활동 등을 포함해서 활동의 중심점이 되어 준 사람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17 이하, 집회나 데모의 규모를 가능한 한 기재하겠지만, 한국에서 실시되는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여겨질 것이다. 특히 반천황제운동의 경우 경찰의 과잉 경비(데모 도중에 참가를 못 하게 막거나, 방해하는 우익을 그냥 두거나 하는 등)나 인상 조작으로 길 가는 사람들과 분리하는 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위 계승 시기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사회운동이 성장하지 못한 사정에 대한 논의가 자주 이루어진다. 국가체제에 저항하지 못하는 길들여진 민중의 자세는 미디어와 교육의 영향이라고 지적하지만, '우민화 정책'의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결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논문에서 고찰하겠다.

항의하면 족족 체포해 버리는 이 상황.

일본에는 천황 비판 시민 데모의 자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 놈들은 단속해!’라는 우익의 세계관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¹⁸

필자가 데모가 끝난 후에 목격자에게 확인해 보니 귀 바로 옆에서 ‘계속 앞으로 걸어가세요’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양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기동대원 몸에 참가자 몸이 접촉했다는 것이었다. ‘드리눅기 공무방해¹⁹조차 없었다’고 한다. 명백하게 처음부터 체포할 생각으로 경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데모가 끝난 후에는 바로 3명이 구속된 쓰키지(築地) 경찰서로 40명 정도가 달려갔다. 약 1시간에 걸친 항의 행동. 그것은 불법 체포한 경찰에 대한 항의인 동시에, 아니 그것보다 오히려 구속된 사람들에게 대한 격려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릴레이였다. 성별이나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구속되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과거 비슷한 데모에 참가해서 불법 체포로 며칠 동안 구류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체험, 경찰 조사의 압력에 굴하지 말라는 응원과 더불어 체포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호소하면서도 “지각 없는 사람들은 당신들을 질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런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나 “너무 힘들면 무리해서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와 같은 저마다의 격려와 연대의 메시지는 각자의 시위운동경험, 그리고 생활 경험에서 나온 다양한 언어들이 엮인 문장이었다.

18 <https://twitter.com/zzOMecpIvqvy9G9/status/1186634570587787269>(최종 검색일: 2023. 10. 30.).

19 신체접촉이 없는데도 공간경찰이 데모 등의 참가자 앞에서 일부러 넘어진 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데모 등 항의 행동 참가자에 대한 위압 행동 또는 위협행위라 할 수 있다.

② 10·30 구류 이유 개시 공판 및 도쿄지방법재판소 앞에서 나카마²⁰ 석방을 요구하는 마쓰리

체포된 3명은 3곳의 경찰서로 분산되어 구류되었고, 10월 25일에 도쿄지방 검찰청(이하 도쿄지검)에서 10일간의 구류 청구를 했다. 그러나 도쿄지방법재판소(이하 도쿄재판소)는 25일 오후 이 청구를 기각한다. 검찰의 구류 청구를 재판소가 기각한다는 것은 특히 정치적인 탄압 사건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즉 이 기각은 불법 탄압임을 시사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도쿄지검은 결정에 불복해서 준항고를 제출했다. 그 결과 한 명은 석방되었지만, 다른 두 명은 밤까지 심리가 이어졌고, 이후 준항고가 인용되었다.

10월 30일 도쿄지검에서 두 명의 구류 이유 개시 공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검찰청 앞에서는 오와텐 네트워크의 호소로 '나카마 석방을 요구하는 마쓰리'라 부르는 항의행동이 이루어졌다. 14시부터 시작해서 17시까지 노래와 함께 짧은 충의 발언이 이어졌고, 법정으로 들어갔으나 퇴정명령을 당한 사람들의 현장 보고도 있었다. 탄압이라는 국가권력의 폭거에 함께 분노하면서도 그곳에는 마쓰리라는 형태로 즐기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에서 보긴 했는데 웬지 데모가 무서워서 참가 못 할 것 같다고 생각하던 여성 참가자도 있었다. 마이크를 건네받고 주저하면서도 그녀는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라고 데모의 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밤에는 장소를 옮겨서 불법체포에 항의하고 대응해 온 구원회(救援會) 주최로 보고 집회가 개최되었다.

③ 밤 이벤트 '다이조사이 반대! @ 도쿄 스테이션'

2019년 11월 14일, 다이조사이가 이루어진 황거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도쿄 마루노우치(丸の内)역 앞 광장에서 한 시간 정도 항의 행동이 있었다. 경

²⁰ 역자주: 'なかまをかえせ祭り'로, 나카마(なかま)는 뜻을 같이해서 반천황제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찰관들의 울타리에 둘러싸이면서도 모인 사람들은 200명을 넘었다. 그곳에서 각자 배경이 다른 13명이 다이조사이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주최자의 호명에 따라 필자도 마이크를 잡게 되었다.

천황제의 가부장제와 성차별, 신분제도 등에 대한 비판, 노동운동과 비정규고용 문제에서 보는 시점, 기지 반대운동과 올림픽 반대운동에서 보는 시점 등 다양한 입장에서 발언이 이어졌다.

그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중복되지 않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기독교신자이며 일본기독교단의 목사라는 입장에서 발언하기로 했다. 내용은 대일본제국의 군사 체제 속에서 설립된 일본기독교단의 전쟁책임 역사와 종교의식 내용이 터부시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였다. 후자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다이조사이와, 논의를 제기하면 기피 성향이 있는 기독교 의식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발언 직후에 오랫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한 여성이 필자에게 다가왔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천황제에 관해서 교회에서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에 위화감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녀가 교회에서 떨어진 이유였다. 필자의 발언에 대해 “내가 생각했던 것을 전부 말해 주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사정이나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무엇보다 천황제가 지배시스템으로 구동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과 대치하기는커녕 언급하기를 터부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침묵하는 교회라는 조직이 천황제라는 지배시스템과 친화적으로 존립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근대국가를 형성할 때 개국과 동시에 미국 등으로부터의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와 천황제 국가와 영합한 역사가 있다. 물론 저항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대부분 태평양전쟁 때에는 국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신(神)과 천황을 병치하는 역사를 밟아 온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그리고 현재에도 여성을 종속적인 위치에 둔다는 점에서 천황제와 교회는 공통된 의식이 있다.

목소리를 내면 답이 생긴다. 거기에서 호응관계가 생겨나는 것이다. 각자의 경험이 고립된 것이 아닌 누군가와 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거리

에서 출현한 ‘공동성’이다. 그 집회 자체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생기는 ‘공동성’인 것이다. 이미 기독교를 만난 사람들의 영위는 교회라는 조직 내부에 갇혀 있지 않다. 오히려 교회라는 조직에서 불거져 나온 곳에 ‘공동성’의 출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리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도 천황제라는 지배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저항의 형태를 형성해 간다.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항의운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자석처럼 거리로 끌려 나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눈앞에 있던 장애물을 뛰어넘어 거리로 나오는 계기를 오와텐 네트워크 사람들이 만들어 왔다.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을 느끼며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거리에서 출현한 ‘공동성’이다.

사회학자인 오노 미쓰아키(大野光明)는 기지 반대운동이나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반대데모 등에 참가하면서 사회운동이라는 역사화된 사상(事象)을 대상으로 연구활동을 해 왔다. 오노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시절에 친구와 약속한 시각에 우연히 데모와 마주친 경험을 이야기한다. “바로 눈앞 차도에서 이라크 반전 데모행렬이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나도 모르게 보도에서 차도로 발을 들여놓았다.”라는 경험에서 시작한다. “바로 눈앞 차도에서 이라크 반전 데모행렬이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나도 모르게 보도에서 차도로 발을 들여놓았다.”라는 경험에서 시작한다. “바로 눈앞 차도에서 이라크 반전 데모행렬이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나도 모르게 보도에서 차도로 발을 들여놓았다.”라는 경험에서 시작한다. “바로 눈앞 차도에서 이라크 반전 데모행렬이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나도 모르게 보도에서 차도로 발을 들여놓았다.”라는 경험에서 시작한다. “바로 눈앞 차도에서 이라크 반전 데모행렬이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나도 모르게 보도에서 차도로 발을 들여놓았다.”라는 경험에서 시작한다.

그 경험으로 수없이 데모에 참여하고, 그러는 동안에 어느 날 마이크를 건네받아 거리에서 발언하게 된 오노는 처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경험이 쌓여 가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로 데모라는 것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데모 현장에는 전공

투운동, 베트남 반전운동, 공해반대 주민운동, 반천황제운동이나 사형폐지운동 등, 각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시대를 살아온 다양한 사람들의 시위운동 경험이 다양하게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처음 데모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마이크를 건네받았을 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시위운동경험을 했고, 그것을 참조하면서 어느샌가 언어, 사상, 그리고 스타일의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었다.²¹

거리에서 이루어진 항의 행동에 새롭게 참가한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문제를 감지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한데 어울린 것이다. 그리고 데모라는 장소가 지금까지 시위운동을 주도해 온 사람들의 ‘과거’와 함께 성립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과거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각자의 배경을 품은 채 ‘지금-여기’에 있는 하나의 장소로 흘러들어온다. 즉 수많은 과거와 현재가 겹치는 순간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앞의 황위 계승 시기에 발생한 데모 운동에 대한 언급은 이상과 같은 오노가 기술한 시위운동 경험을 통해 자극받은 면도 있다. 필자도 과거 여러 데모 운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당황했고, 넘겨받는 마이크를 손에 쥘 기회를 얻었다. 그때 참조한 것은 다양한 데모의 언어, 사상, 그리고 스타일이다. 이러한 릴레이가 발생시키는 것은 거리라는 공간에서 세대나 시위운동 경험의 차이, 그리고 서로 다른 과제를 연결해 주는 ‘공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89년과 2019년 두 번의 황위 계승 시기에 나타난 일본사회의 상황과 반대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원래 황위 계승에는, 즉, 천황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가로놓여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특히 젠더와 섹슈얼리티 관점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21 大野光明, 「運動のダイナミズムをとらえる歴史実践: 社会運動史研究の位置と方法」, 大野光明, 『社会運動史研究1: 運動史とは何か』, 新曜社, 2019, 51쪽.

3. 황위 계승을 통해 보는 성차별과 이성애주의

1) 황위 계승의 규정

황위 계승이라는 사태를 젠더와 섹슈얼리티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선 황위 계승의 문제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일본국헌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시작한다.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헌법 첫 조항(제1장)에 천황에 관한 조항을 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조항에는 천황은 국사 행사만 수행하고, 국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제4조), 천황이 내각총리대신이나 최고재판소의 재판장을 임명한다(제6조) 등이 명기되어 있고,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천황의 조항이 첫 번째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황위 계승의 법적 근거인 일본국헌법과 황실전범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국헌법」 제2조 황위는 세습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황실전범의 규정에 따라 계승한다.

「황실전범」 제1조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가 계승한다.

‘남계 남자’(男系男子)로 한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한정을 내포한다. 먼저 남자라는 점, 여성은 황위 계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조문에 명기된 바와 같이 천황제는 세습으로 유지된다. 세습이란 특정한 지위나 재산 등을 자손에게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황실전범에서는 양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황위를 혈연관계인 자손

이라는 형태로 계승해야 하는 것이 근대천황제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황위 계승에서는 천황이라는 지위만이 아닌, 황실신도의 제사장 역할도 계승된다. 종교상 황족을 대표하는 일가 가장의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호적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고찰하겠지만, 전후에는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었고 성차별의 근원 중 하나인 가부장제도를 기반으로 한 민법상의 이에제도(家制度)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가장의 재산권 등 가독권을 단독으로 장남에게 계승하는 제도도 사라졌다. 그러나 가장인 남계 남자에 한정하는 황위 계승의 규정을 보면, 여전히 황실에는 이에제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가계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신분제도이기도 하다.

이 세습으로 유지되는 천황제라는 시스템이 내포한 문제를 다음 ① ‘남계 남자’라는 규정과 ② 출산의 강제라는 두 가지 관점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

① ‘남계 남자’라는 규정

우선 남계 남자라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자.

왜 전후에도 여전히 황위 계승을 남계 남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남아 있을까? 다시 말해 왜 여성배제의 황위 계승 규정이 존속된 것일까?

여성사 연구자인 가노 미키요는 “근대 이전 천황제에는 스이코 천황(推古天皇)을 비롯한 8명의 10대 여제가 있었고, 황위는 여성에게도 열려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황위 계승을 남계 남자로 한정된 구 황실전범 제정 과정을 “일본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천황제의 전통을 무시한 처사였다.”라고 지적한다. 근대천황제의 형성 과정에서 요구된 것은 “단지 근대국민국가의 통합원리”로서의 기능이였다. 그래서 “‘지귀지존’(至貴至尊), ‘만세일계’(万世一系)의 권위가 있는 존재로 민중에게 수용되어야 했다.” 따라서 “남존여비 통념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천황은 남자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²²

여기서 협의된 점은 ‘만세일계’라는 픽션을 ‘남성 남계’의 혈통으로 이

22 加納実紀代, 『天皇制とジェンダー』, 176쪽.

어 가는 것이다. 만세일계라는 것은 오랫동안 계승되어 온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어 전통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다.

이러한 픽션과 함께 구축된 시스템이 이용한 것은 '남존여비의 통념'이었다. 사실 하나의 가치관을 국가라는 틀 속에 침투시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구 황실전범을 제정할 때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남존여비라는 사회통념이 어느 정도 확산해 있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행 규정은 대일본제국헌법 2조, 구 황실전범 1조를 답습했다는 점이다.²³ 그 결과, 백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같은 조문이 남아 있는 것이다. 태평양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의 국가체제가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은 적지 않다. 분명히 천황은 더 이상 '현인신'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위 계승의 규정을 보면 여성이 배제된다는 점에서도 전전과 전후는 연관성이 있다. 대일본제국이라는 군사주의·식민지주의 체제 속에서 제정된 법률이 전후에도 답습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후 헌법과 민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남존여비의 통념이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천황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계 남자의 규정이 잔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남계 남자로 한정된 규정은 지금까지 누차 문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유엔에서도 혐의된 바가 있다. 1979년 국제연합 제34회 총회에서 채택되어 2년 후에 발효된 여성차별철폐조약을 일본이 비준한 것은 겨우 1985년이 되어서였다.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인 조약이었지만, 비준한 일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차별철폐와는 거리가

23 대일본제국헌법과 구 황실전범은 1889년에 제정되었다. 메이지가 시작된 지 21년 후이다. 이러한 성립과정에서 근대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종교적 권위를 천황에게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다. 이듬해인 1890년에는 교육칙어가 정해지고, 학교 교육에서 천황제의 국제호지체제(国体護持体制)가 구축된다. 이 지배시스템은 배외주의를 수반하면서 구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오키나와(沖縄)와 구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정책이었다. 헌법 제1장과 교환하여 GHQ가 9조(전쟁포기)를 명기했다. 쇼와 천황이 GHQ에게 오키나와를 군사 점령지로 승인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1947년 9월 9일 오키나와 메시지) 동시에 일본국헌법 시행 전날인 1947년 5월 2일에 최후 칙령으로 '외국인 등 록령'을 공포한 것도 기억해야 한다. 천황제 유지와 오키나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처우를 나란히 두고 생각해 보면, 국민국가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고찰하겠다.

먼 이야기였다. 이 조약의 수행에 있어 다양한 법적·제도적인 제약과 더불어 습관과 의식에서 나타나는 저해 요인이 지적되었다.

일본의 경우에 그 저해 요인으로 천황제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일본정부의 제7·8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총괄 소견 최종 견해안에 기재된 황실전범의 재검토를 들 수 있다.²⁴ 위원회는 “황위 계승권에 남계 남자 황족만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여성 천황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표명한 후 황실전범의 개정을 권고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권고에서 황실전범에 관한 기술이 삭제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²⁵ 결과적으로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당시)은 “국민에게 지지받고 있는 황실제도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반론하고, “황위 계승 방법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황실전범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²⁶

황위 계승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 상황을 국제사회에서도 터부시하려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산의 강제

다음으로 황위 계승을 위해 중요한 출산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세습제로 구동하는 시스템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 근대천황제에서는 과거 출산 역할을 맡은 여성들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측실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황실전범에는 ‘천황 및 황

24 황실전범에 기재된 여성·여계 천황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 제4·5차 일본정부 보고서 심의에서도 거론되었다.

25 총괄의견은 위원회의 제결 후 공포 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약국에 송부되어 24시간 이내에 수정 요청을 받는다. 삭제 보도를 한 미디어는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이었다. 당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이던 하야시 요코(林陽子)는 원칙적으로 조약국과 유엔 스텝 사이에서만 주고받던 내용을 요미우리신문이 어떻게 취재한 건지 분명치 않다고 말한다.(國際女性の地位協会, 「林陽子さんへのインタビュー: 女性差別撤廃委員会委員としての11年間の活動を振り返って」, 『國際女性』第33号, 2019년, 9쪽).

26 『日経新聞』, 2019년 3월 9일.

죽은 양자를 삼을 수 없다’(제9조)고 명기되어 있어서 혈연관계를 이어 가는 것이 필수이다.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황위 계승에는 여성의 신체가 필수불가결하다. 즉 이 제도는 여성에게 사내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필수다. 세습으로 존속하는 만세일계 사상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픽션이지만, 황족 남자가 결혼하고 싶지 않아도 여성과 결혼해서 아내에게 사내아이를 출산시키는 것을 수반하는 사상이기도 하다.

천황제라는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생식을 동반하는 남녀 한 쌍의 관계를 ‘올바른’ 것으로 여기는 사상은 이성애 규범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규범에서 벗어난 성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의 방식²⁷이 저해되고,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는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출산이 강요된 여성의 신체가 얼마나 가혹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현 천황인 나루히토의 아내인 황후 마사코(雅子)가 놓였던 상황은 아직 사람들의 기억에 새로울 것이다. 황후가 된 마사코는 1963년에 태어나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후 도쿄대학에 편입했다. 그리고 중퇴해서 외무성에 들어가 외교관으로 근무했는데, 그 전후로 매스컴에서 황후선택(お妃選び)의 후보자로 과도하게 보도되었다. 1993년 1월에는 결혼 내정이 보도되었고, 같은 해 6월에는 결혼 의식(結婚の儀)이 거행되었다. 그런데 결혼 후 한참 동안 임신 소식이 없었다. 1999년 12월에 유산에 대한 보도, 2001년 4월에 임신 발표, 그리고 같은 해 12월 1일에 첫 아이로 아이코(愛子)가 태어났다.

그사이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다. 여성 불임인지, 남성 불임인지, 아니면 양쪽 다 아닌지, 보조생식기술이 사용된 것은 아닌지와 같은 풍설이 여

27 여기서 말하는 규범에서 벗어난 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레즈비언 처럼 이성애와 짝을 이루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한 사람들과, 호적의 성별 변경에 수술 요건이 의무화된 트랜스젠더 사람들이다. 또한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출산하는 성’(産む性)의 강요와 그와 정반대로 ‘출산하면 안 되는 성’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해 둔다.

성주간지 등에 게재되었지만, 진실은 모른다. 기밀 보호와 터부시가 철저하게 보호되었기 때문이다. 사생활 영역에 속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일이 국가 시스템 속에서 반복적으로 큰 사건처럼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광경이다. 여기에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SRHR)도 사생활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출산에 대한 엄격한 기대, 아니 강요, 그리고 황후 계승을 위해 사내아이를 낳아야 하는 제도. 이렇게 누군가가 황위 계승자를 낳아야 하는 제도는 성차별과 이성애주의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2) 여계 · 여성 천황의 가능성이라는 기만

또한, 앞에서 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예정했던 권고처럼 황위 계승이 남계 남자에 한정되고 여성 천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좀처럼 사내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 내각에서는 2004년 12월에 황실전범에 관한 지식인 회의가 구성되었고, 협의 결과 이듬해 11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거기에는 ① 여성 천황 및 여계 천황을 인정한다, ② 황위 계승 순위는 남녀를 불문하고 첫아이를 우선한다, ③ 여성 천황 및 여성 황족의 배우자도 황족으로 여긴다(여성 미야케(宮家)의 설립을 인정한다) 등이 기재된 것이다.²⁸

이후 아키시노노미야케(秋篠宮家)에 사내아이 히사히토(悠仁)가 태어난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황실의 장래를 우려한 여성 천황이나 여계 천황에 대한 화제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 정부지식인 회의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① 여성 천황이 결혼 후에도 황적의 신분을 유지, ② 양자결연에 따라 구 황족 남계 남자의 황족 복귀라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23년 11월에는 정부 여당

²⁸ 혼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적이 필요하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황족은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여성 천황이 황족 외 남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새로운 호적을 편성해야 하고, 황적이탈이 황실전범에 규정되어 있다. 즉 혼인 후에도 황족으로 남거나 배우자가 황족이어야 한다는 것은 황실전범 개정에서 요구되는 점이다.

인 자민당이 총재 직할로 안정적인 황위 계승 확보에 관한 간담회의 첫 회합을 개최한다. 보도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郎) 회장은 “구체적인 방책에 관해서는 황실전범 등의 법개정의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법개정도 염두에 둔 검토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²⁹

일본정부와 천황제를 유지해 온 사람들에게 남계 남자만 황위를 계승한다는 시스템은 인재 부족으로 인해 황위 계승이 단절될 위기감까지 느끼게 한다. 그래서 천황제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여성 천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생겼다. 구체적으로는 나루히토의 첫아이인 아이코가 황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남계 남자로 한정된 천황제 존속의 목적이 아닌, 이른바 성별보다 ‘혈통’의 근접성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망각되고 있는데, 황실제사에는 ‘여성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여성 천황 용인론 속에서 천황을 제사장으로서 세우는 황실 종교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여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남계에 한정된 계승을 폐지하고, 일본국 헌법 제정 때 폐지된 미야케[宮家, 천황에게 미야고(宮号)를 하사받아 창설한 일가를 부활시킨다는 의견이나 황적을 이탈한 황족 여성을 복귀시킨다는 의견, 또는 황실 여성이 황실 외 남성과 결혼해서 황위 계승자를 낳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견은 여계라는 혈통에 따른 황족 응립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천황제는 성차별을 기반으로 구동된다고 언급했는데, 지금까지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여성 천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어느 정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앞서서도 인용한 가노 미키요도 과거 천황 계승에 내재한 명백한 성차별의 방치를 문제시하며 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여성 천황의 가능성을 제시했다.³⁰

29 『京都新聞』, 2023年 11月 18日.

30 加納実紀代, 『「銃後史」をあるく』, インパクト出版会, 2018.

그 외에 인터뷰 기사를 통해, 사회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무타 가즈에도 황위 계승을 여성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³¹ 이 기사에는 2019년 황위 계승 시기에 각 사의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0% 전후가 여성 천황에 찬성 의견이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현 천황의 장자인 아이코가 '다음 천황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소개되었다. 왜냐하면 남계 남성만 황위 계승자로 규정한 황실전범은 '일본사회의 여성 차별을 반영'한 것이고, 이러한 "황실의 여성 차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본사회에서 여성이 살아가기 힘들다는 본질적인 문제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사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아이코 내친왕은 천황과 황후 양 폐하의 품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래 즉위하면 천황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라서 안 된다'는 생각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황위 계승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기사는 편집자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무타 가즈에가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향성이 페미니즘에도 확산하여 그러한 관점으로 천황제의 존속 문제를 논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에서 시작된 근대천황제의 출발점이 맞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성 천황론 문제는 황실신도 제사에 '여성금지'가 포함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천황의 역할에는 황실 제사의 수장역할도 있다. 물론 여성 천황을 인정하게 되면 황실 신도도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여성 천황을 용인하는 페미니즘에서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분명 현대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계승하지 못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여론에서도 여성 천황의 가능성을 지지한다. 2019년

31 牟田和恵, 「『皇室の女性差別』撤廃を!ジェンダー研究者の女性天皇論」, 『女性自身』, 2020年 2月 11日号.

11월에 지지통신(時事通信)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황위 계승을 남계 남자로 한정하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8.5%에 그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답한 사람은 76.1%였다.³²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계 남자로 한정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계 천황이나 여성 천황이 인정된다고 해도 특정 가계만 고집하는 세습제는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이성애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특정 성차별 측면만 거론하며 규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태도는 이러한 시스템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분단만 초래하지는 않을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여성 천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천황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분리된 것이 아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국민관리 시스템으로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그것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는 존속한다. 이러한 것들을 내포한 문제가 일본사회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황실전범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리고 남계 남자만 계승되고 양자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천황제는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천황제 소멸에 일본사회의 미래를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즉 필요한 것은 황실전범을 개정해서 남녀동권을 얻는 것이 아닌, 천황제 그 자체의 폐지이다. 사실 개정은 현행 정부도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합할 필요는 없다.

덧붙이면, 황위 계승자를 낳는 생식을 동반하는 남녀 한 쌍의 관계성을 '올바른' 것으로 보는 사상은 이성애주의를 강화시키는 사고이기도 하다. 영문학자이자 페미니즘 이론 연구자인 다케무라 가즈코(竹村和子)는 이성애주의(헤테로섹시즘)³³와 성차별(섹시즘)을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며 '헤테

32 황위 계승에 관한 지지신보 여론조사(2019년 11월 8~11일)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986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다.

33 다케무라 가즈코는 이성애주의를 '이성애를 유일한 합법적 사랑의 형태로 보며 그것을 강제하는 이성애중심적인 사고'로 정의한다[竹村和子, 『愛について: アイデンティティと欲望の政治学』, 岩波書

테로)섹시즘'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다케무라 가즈코에 따르면 “동성애 차별은 근대시민사회의 성차별(섹시즘)을 전제로 성차별을 촉진하는 장치로 편성된 것”이다. 그때 “규범으로 근대사회가 재생산하는 것은 이성애 전체라기보다는 단 하나의 ‘올바른 섹슈얼리티’의 규범”이다. 다케무라가 말하는 ‘올바른 섹슈얼리티’란 “중신적인 단혼(monogamy)을 전제로 하여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얻고 계급을 재생산하는 가정의 섹슈얼리티”다.³⁴ 거기에서는 다음세대의 재생산과 중신적인 단혼이라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여성의 신체를 이용해서 계승되는 황위는 바로 이러한 ‘올바른 섹슈얼리티’의 규범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장치다. 따라서 규범에서 벗어난 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가 거부당하고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는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겠다.

그렇다면 어떤 이데올로기가 근대천황제를 지지해 온 것일까.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4. 국가통합의 이데올로기 장치

‘国家’라는 단어에 ‘家’라는 한자가 쓰이는 것처럼 일본의 근대화에는 국경선으로 구별된 ‘국가’(国)를 하나의 ‘가족’(家)으로 간주해서 국민을 관리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젠더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4장에서는 국가의 기둥으로 근대천황제가 구축되는 양상을 통해 ① 사상체계의 역할을 하는 ‘가족국가관’이라는 이데올로기와 ② 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법 제도의 역할을 하는 호적제도를 검토하겠다.

店, 2002, 309쪽(주석2)]. 여기에서는 이성애(헤테로섹시즘)와의 구별도 명시되어 있다. 이성애주의는 배외적 사회규범 중 하나이고, 또한 이성애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해 둔다.

34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アイデンティティと欲望の政治学』, 37~38쪽.

1) 이데올로기로서의 ‘가족국가관’

우선, 가족국가관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보자.

근대천황제의 성립과 동시에 가부장제가 강화되면서 이용된 이데올로기가 가족국가관이다. 가족국가관이란 국가를 천황가를 중심으로 한 일대 가족(一大家族)으로 간주하며 국민관리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다. 국가라는 하나의 ‘가족(이데)’은 가부장인 천황과 가부장을 아내의 역할로 도와주는 황후를 중심에 둔다.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신민)’은 천황의 적자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천황제를 가족도덕과 연결해 천황이 곧 가장인 ‘의사가족’(擬似家族)으로 생각하는 이데올로기가 일본의 근대화 속에서 창출된 것이다.

국가가족관에 기반을 둔 국민도덕론을 견인한 철학자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는 「교육에 관한 칙어(교육칙어)」가 발표된 이듬해에 문부대신의 의뢰를 받아 해설서 『칙어연의』(勅語衍義, 1891)를 썼다. 그 해설서에서는 군주와 국민(=신민)을 부모와 자손의 관계로 비유한다. 천황의 이름으로 내린 명령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내리는 ‘자비심’ 있는 ‘분부’, 즉, 지시와 겹친다.

앞에서 인용한 가노 미키요는 가족국가관은 강한 아버지의 천황 이미지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전쟁 중에 내세운 팔굉일우(八紘一宇)라는 슬로건은 “일본 밖에서 보면 명백한 침략의 논리이지만, 일본 안에서 보면 오히려 ‘와’(和)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사랑’의 논리였다”는 것이다. 가노에 따르면, 당시 문부성교학부에서 국민교육용으로 편찬한 『국체의 본의』(國體の本義)(1937)³⁵가 제시한 것은 “가족국가 일본의 ‘와’의 정신을 세계로 확장시킨다”는 것이었다.³⁶ 천황을 정점으로 한 가족국가라는 이데올로기는 천황의 은혜를 받은 ‘사랑’이라는 픽션을 이용해서 그 혜택을 받은 국민이 이데올로기 그 자체를 지지하고 재생산하는 양방향의 형태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35 『국체의 본의』는 당시 문부성교학부가 국민교육용으로 편찬한 교과서다.

36 加納実紀代, 『天皇制とジェンダー』, 160쪽.

또한 가족국가관은 가장인 천황만이 아닌, 황후와 나란한 어진영(御眞影)에서 상징하는 바와 같이 근대적인 황후상도 함께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부모’로서 천황과 황후의 위치가 정해진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한 쌍의 남녀라는 커플상을 제시하여 침투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즉 천황과 황후라는 부부 한 쌍을 중심에 둔 이데올로기는 이성애주의라는 규범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2) 사회시스템으로서의 ‘호적제도’

다음으로 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법 제도로서의 호적제도를 고찰하겠다.

앞에서 이야기한 가족국가관은 단순히 관념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호적제도라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호적제도는 사람들을 거주하는 토지와 연결해서 파악하고 등록하는 전국적인 국민 관리시스템이다. 이 제도에 따라 ‘국민’이라는 틀이 형성되었다. 가장 처음 만들어진 호적제도는 ‘임신히적’(壬申戶籍)(1871년 포고, 이듬해 시행)이다. 정치학자 엔도 마사타카(遠藤正敬)는 임신히적에 일본인의 질서화라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말한다.³⁷

- ① 개인을 획일적으로 호적에 편입시켜 천황에 종속하는 ‘신민’이라는 수평관계의 구현화
- ② 거주지주의에 따른 국민의 정의
- ③ ‘신민’의 호적등록을 통해 신도지배에 편입

‘신민’이란, 군주제에서 군주에게 지배받는 인민을 뜻한다. 거기에는 명확한 지배-피지배 관계의 질서가 존재한다. 신민 사이의 수평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호적제도는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평민’이라는 새로운 위치를 정해 주었다. 즉 새로운

37 遠藤正敬, 『戶籍と国籍の近現代史: 民族・血統・日本人』, 明石書店, 2013, 122~124쪽.

기호가 부여된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근대 이후에도 신분질서에 따른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임신호적에 편성되지 않았던 홋카이도와 류큐(오키나와·아마미)는 나중에 편입되지만, 이러한 경위는 호적제도가 ‘국민’과 ‘영토’의 경계선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호적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호적 제도는 근대국가 일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징병(군사)과 징세(국가자금)를 위한 국민 관리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그 기초단위가 ‘호(戶)’였다. ‘호’는 반드시 거주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임신호적에서는 토지와 연결된 ‘호’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근대화나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시작되면서 이미 토지와 사람을 연결하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새롭게 편성된 ‘메이지 19년 호적’(明治19年 戶籍)에서는 ‘이에’라는 개념이 이용되었고, 호적의 목적은 오직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의 신분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호적제도가 확립된 것이다.³⁸

메이지민법이 제정된 것은 1898년이다. 가장(호주)과 그 가족은 같은 성씨를 사용해야 한다(746조), 혼인하면 아내는 남편의 ‘이에’로 들어가야 한다(78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계혈통을 중시하고 장남이 가명(家名)이나 가독(家督), 제사권을 계승한다. 이와 같이 국민 관리의 기초단위에 ‘이에’를 두고, 남성을 가장으로 세우는 이에제도를 민법에 편입하면서 성역할분업을 고정화한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대천황제의 근간에는 만세일계라는 픽션이 자리 잡고 있다. 남계 남자로 황위를 계승하고, 남계 혈통이 길게 이어지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픽션으로서의 ‘만세일계’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천황가라는 종본가(宗本家)와 수직관계로 존재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지지

38 현재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은 호적부와 주민기본대장에 따라 이종으로 관리된다. 선거, 연금, 건강보험, 의무교육 등 대부분의 주민 서비스는 주민기본대장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주민기본대장은 호적이 거주상태를 통제하는 기능을 상실하면서 본적지를 떠나 다른 토지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된 기류법(寄留法, 1914)에서 출발했다. 이 법률은 주민등록법이 시행(1952)되면서 폐지되었고, 1967년에는 주민기본대장법으로 형태를 바꿨다.

하는 각각의 이에에도 남계 혈통 속에서 장남이 가명이나 토지·재산, 제사권을 계승하는 가독상속제도가 규정되었다.³⁹

가노 미키요는 근대천황제와 함께 형성된 이에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국민은 ‘이에’에 귀속되고, 이에를 통해서 국가로 통합되었다. 그 국가의 대리인으로 가족을 통솔하는 사람이 장남을 원칙으로 하는 ‘호주’이다. 호주는 강한 남권(男權)과 친권을 배경으로 아내와 딸을 관리할 수 있다. 지금 여성차별의 근원으로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가부장제는, 일본의 경우에 이렇게 근대천황제 국가체제의 대리인으로 만들어진 호주권 강화의 이에제도를 말한다.⁴⁰

사적영역에 배정한 ‘이에=호’를 공적영역에 배정하여 ‘국가’와 유사한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호적제도다.

일본정부에서는 호적제도란 부부와 친자라는 신분제도의 등록시스템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호적 연구자인 사토 후미아키(佐藤文明)는 일본의 호적제도에는 신분관계등록 외의 기능이 있고, 그래서 ‘차별의 온상’이 되어 온 것을 시스템 내부를 통해서 분석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나 황족의 경우를 들어 외국적의 경우에는 호적에 편입될 수 없다. 그래서 일본국적 보호자와 외국적 사람이 혼인이나 친자관계인 경우 신분증명이 호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황족의 경우에는 호적부와는 별개로 대통보(大統譜, 천황, 황후)와 황족보(皇族譜, 그 밖의 황족)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황통보(皇統譜)라고 한다.⁴¹

왜 이러한 사람들을 분리해야 했을까. 사토는 분리된 사실을 통해 천황

39 그러나 천황가와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이에 계승이 목적인 호적제도에서는 양자가 용인된다.

40 加納実紀代, 『天皇制とジェンダー』, 180쪽.

41 황통보는 메이지 초기에 정리되기 시작했고, 법제화된 것은 1926년이다. 반세기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제와 호적제도는 한 쌍의 제도로 구축되었다고 지적한다. 즉 천황제와 호적 제도는 단순히 병렬하는 것이 아닌, 서열의 관계 속에서 배치되어 상보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구 황실전범에는 황족이 황통부에서 이탈하여 호적에 편입하는 것을 신적 강하(臣籍降下)라고 명기했다. 여기에서는 호적과 황통부의 관계가 분명하게 시사된다. 즉 황통부는 신민의 등록부인 호적의 상위에 위치한다는 의미다.

사토는 이러한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호적부는 ‘천황을 모시는 자’가 등록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토에 따르면 천황제에서 ‘신민’의 존재를 밝히고, 그 신민을 이에로 조직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기에 ‘천황제 사회를 지배하는 자는 제외되고’, 외국적 주민처럼 ‘천황제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자(모시지 않는 자)도 제외된다.’ 이와 같은 호적제도는 ‘천황제의 지배에 복종하는 자(모시는 자)만의 등록부’로서 기능하는 것이다.⁴² 또한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세대로 묶는 것처럼 이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질서의 형성으로도 기능한다.⁴³

예를 들어 ‘천황을 모시는 자’들은 호적제도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부락차별과 혼외자차별, 외국인차별에 직면한 당사자들은 이것이 명확한 지배형태, 차별을 재생산하는 제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의식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차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3) 가족정책을 통해 보는 ‘가족국가관’의 유지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국가관은 태평양전쟁 후에 헌법 및 민법개정으로 중

42 佐藤文明, 『戸籍うらがえ史考: 戸籍・外登制度の歴史と天皇制支配の差別構造』, 明石書店, 1988, 37쪽.

43 호적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와 그 제도를 기반으로 한 혼인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혼’(反婚)이라는 관점에서 호리우치 유리(堀江有里), 『レズビアン・アイデンティティーズ』, 洛北出版, 2015에서 고찰했다.

결된 것일까.

아키히토가 생전퇴위 의향을 드러낸 이유 중 하나로 고평화에 따른 체력의 한계라는 점이 있었다.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하는 천황은 복지시설 방문이나 피해자 방문, 전쟁의 기억을 위한 행보다. 역사가자인 가와니시 히데야(河西秀哉)는 이러한 행위는 “일본국헌법에 규정된 국사행위가 아닌 ‘상징’으로서의 공적 행위의 확대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이미 “‘원수’로서의 개념까지 내포한 이상 ‘상징’으로서의 행위”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미디어의 호의적인 평가를 통해 사람들도 그것을 수용하고, 의식조사에서도 “천황이 모색해 온 ‘상징’으로서의 천황상을 지지한다”와 같은 상태를 형성해 왔다.⁴⁴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마땅한 천황상’을 모색해 온 아키히토의 모습을 다룬 미디어의 보도형태다. 천황의 ‘공적행위의 확대’ 속에서 미디어가 발신해 온 것은 아키히토가 혼자가 아닌 대부분 당시 황후였던 미치코(美智子)와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었다. 즉 미디어에서는 ‘부부’라는 유닛이 제시되어 온 것이다. 황실관련 보도는 항상 이런 형태였는데, 가족을 전면에 내세우며 호의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봐도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는 계속 재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교체된 나루히토도 ‘마땅한 천황상을 모색해 왔다’고 말하는 아키히토의 뜻을 계승하여 천황의 국사행위로 명기되지 않은, 즉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엄마의 무릎에서 자란’ 나루히토와 커리어우먼 출신인 마사코라는 ‘민주적 이미지’ 또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는 이미 미디어에서 표상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동시에 2004년에는 적응장애로 보도된 마사코의 건강상태에 대해 이미 산후우울증을 추측하는 지식인의 견해도 발표되었다.⁴⁵ 적응장애라는 황실

44 河西秀哉, 「戦前から揺れ動いてきた近代天皇制: 『おことば』が突きつけた象徴の意味」, 『Journalism』 第318号(2016年 11月号), 朝日新聞社, 2016, 27쪽.

45 『女性セブン』, 2018年 10月 18日号 등.

생활전반에 걸친 배경을 ‘산후우울’이라는 출산의 일시적인 상태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 황위 계승 전에 이미 황후로서의 공무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부부 한 쌍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 ‘좋은 사람들’, ‘평화’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이성애주의의 규범은 계속 재생산되는 것이다.

또한 이 부부 한 쌍의 모습은 선대와는 다른 이미지로 형성되었다. ‘엄마의 무릎에서 자랐다’는 나루히토와 커리어우먼 출신인 마사코가 이룬 ‘민주적 이미지’ 또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는 이미 이용되었다. 커리어를 버리고 가정으로 들어가 남편을 섬기는 마사코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를 걱정하고 지지하는 나루히토는 남녀공동참여사회(男女共同参画社会)라는 시대 이미지에 부합한 천황제다. 남녀공동참여사회란 남성과 여성이 국가에 협력하여 함께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정책에 지나지 않다. 일본정부가 그린 그림은 ‘성차별금지’도 ‘젠더 평등’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 성차별은 온존된 채 해소되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천황과 황후는 부부 한 쌍으로 행동하면서 ‘좋은 사람들’, ‘평화’라는 이미지를 전파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성애주의의 규범이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정이 거론되는 헌법을 봐도 가족국가관에 근거한 국민국가형성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자민당 헌법초안(2012) 전문에 일본이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을 받드는 국가’임이 적혀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조항에서 현행헌법과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원수이고 일본국,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제24조] 가족은 사회의 자연 또한 기초적인 단위로 존중된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강조, 필자)

여기에 제시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천황은 다시 ‘원수’가 되고, 현행 법률에는 ‘가족’을 정의하는 문구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단위로 존중된다’고 하면서 상호부조의 유닛으로 규정한다.

이 초안에 나타난 사상은 다른 정책에서도 비슷한 경향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혼인관계를 맺을 때 부부가 같은 성씨(氏, 우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성씨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선택제 부부별성제도의 법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소송이 벌어진 일도 있고, 2015년 12월 16일에는 부부 동성을 강제한다는 현행 혼인제도를 합헌으로 판결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판결은 현재 90% 이상이 남편의 성씨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고, 가족의 호칭을 하나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최고재판소의 판단이었다.⁴⁶ 또한 여성활약추진법(2016년 4월 시행)⁴⁷은 기본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명기한다.

여성이 직장생활에서 활약하기 위한 추진은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간호 등 기타 가정생활에 관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일이 많은 점, 그 밖에 가정생활에 관련된 일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가족을 구성하는 남녀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사회의 지원으로 육아, 간호 기타 가정생활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면서 직장생활에 필요한 환경 정비 등 남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원만하고 지속적인 양립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제2조 2 / 강조, 필자).

여기에서 전제로 하는 대상은 결혼·임신·출산·육아·간호와 같은 가정의 성역할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여성이다. 즉 여성 전부가 아닌 결혼출산과 같은 인생 과정을 밟아 가는 여성을 전제로 해서 제정된 법률임에

46 이 판결에서는 부부동성을 강제하는 민법 750조가 혼인할 때 '성씨의 변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는 인격권의 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부부동성 그 자체에 남녀 간의 형식적인 불평등이 존재할 리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 제13조, 헌법 제14조 1항, 헌법 제2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고재판소가 내린 것이다. 그러나 15명의 판사 중에 소수 의견으로 다섯 명이 위헌으로 판단했다. 여성판사 3명은 전부 위헌판단을 제시했다.

47 정식명칭은 여성이 직장생활에서 활약하는 추진에 관한 법률(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2015년 9월 성립)이다.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상징되는 ‘가족’이란 주로 경제적인 부양자 남성과 그 남성을 가사와 육아를 하면서 도와주며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는 부부가 중심이다. 이러한 가족을 상징한다는 것 자체가 성역할을 전제로 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성애주의라는 사회규범 속에서 상징된 가족이라는 유닛이다.

5. 또 하나의 반천황제 시점: 퀴어 연구 관점에서

천황제 시스템 자체도 그것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도 성차별의 온존 장치라는 점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즉 여성에 대한 차별을 깊숙이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그때 언급하는 ‘여성’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무의식중에 상징되는 대부분의 여성은 이성애 여성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또 하나 이성애주의를 온존하는 천황제 문제로 퀴어 연구 관점에서 다소간의 고찰을 덧붙이려고 한다. 퀴어(queer)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지만, 원래는 사회에서 인식되는 ‘올바른 여성’에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독자적인 사회구조 문제, 즉 민족/인종과 식민지주의, 국민국가라는 개념과 천황제 문제 등을 시야에 둔 퀴어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국가의 통합 시스템으로 근대에 도입된 천황제는 단지 사회제도의 기능으로 법에 기재된 것만이 아닌, 실제로 의식과 습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상 그 사회구조에 내재한 젠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권력관계가 개입된 남녀 이원론의 사회에서는 이성애주의라는 성 규범이 존재한다.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지적된 지 오래지만, 고도경제성장기에 확산된 일본사회의 노동 형태는 원래 남성 중심의 모델이었다. 그 모델은 한편에서 남성이 ‘밖에서’ 임금노동에 종사하며 생애를 위한 ‘가족임금’을 획득하고, 다른 한편에서 여성이 ‘안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가사, 육아, 간호를 포함한 무상노동을 부담하며 지지한다는 것

을 전제로 한다. 일본에서는 이 모델에 따라 1980년대에도 연금개혁이 시행되었다.

1985년에는 제3호 피보험자가 제도화되어, 샐러리맨과 전업주부에 대한 우대정책이 채택되었다.⁴⁸ 즉 여성이 정규노동자 시장의 중심에서 소외되면서 남성을 모델로 한 ‘기업전사’가 형성된 것이다. 물론 주부가 임금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대 대상에는 연간 임금의 상한을 정해 놓았는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 여성의 역할이 기업전사인 남성을 서포트하는 보조적인 위치로 여겨진 것이다.

1980년대에 연금개혁 등에 따라 법적으로도 든든한 지원자가 생긴 후 1990년대에는 새로운 성역할 분업체제가 고정화된 형태로 더욱 확산되었다. 앞에서 본 여성 활약 추진법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여성이 가사일이나 육아 외에 가계의 수입을 보조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파트타임 노동을 하는 패턴이다. 아내가 피부양자로 단시간의 노동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넘지 않으면 남편의 연금과 세금에 대한 우대조치가 있다. 고용자는 단시간의 저임금노동 쪽이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임금노동자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노동력의 유지와 재/생산의 시스템으로 이성애주의의 장치를 통해 유지된다.

예를 들어 남녀 커플링을 이루지 않는 레즈비언은 이러한 노동력 유지와 재생산 시스템 속에서 역할분담을 할당받지 못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앞에서 본 남계 남자 출산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받는 황실 여성들을 보면, 거기에 가로놓인 문제는 이러한 레즈비언의 상황과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황실 여성에게 요구되는 기대나 규범이 일본사회의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보도하고 있는 황실가족규범 모델은 확실히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8 같은 해에 일본에서는 노동자파견법이 성립되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이 연금개혁은 고용파괴의 선구가 되었다.

이렇게 정반대 위치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즉 이념적으로 파악하면 레즈비언은 남계를 중심으로 적출자, 즉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부부)가 ‘올바르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존재다. 적출자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국가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는 레즈비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승인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통합되고 이용되는 신체를 모색하는 방향성조차 보인다. 예를 들어 가족이라는 형태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법적 승인의 요구를 통해서 말이다.⁴⁹ 거기에는 국민통합을 위한 일체화라는 유혹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즈비언이라는 존재가 남계 적출자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념적으로, 이상과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겠다.

6. 마치며: 이후의 과제

이 글에서는 두 번의 황위 계승을 통해서 일본사회의 상황과 구체적인 반천황제운동에 대해 살펴봤다. 또한 반대운동의 동인 중 하나인 성차별과 이성애주의를 온존하는 천황제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1973년부터 5년에 한 번씩 NHK에서 실시하는 <일본인 의식> 조사 항목 중 하나에 ‘천황제에 대한 감정’이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천황제에 관한 감정’에 대해 ‘존경’이 41.4%, ‘호감’이 35.8%라는 수치가 제시되었다

49 물론 이성커플에게만 부여된 혼인제도에 접근할 권리(동시에 의무)가 동성커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는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혼인평등을 주장하는 논의나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두겠다. 혼인제도에 따른 사람들의 동성강제제도를 포함해서 현행 혼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도 동성커플의 양육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성커플이 양육하는 아이들을 법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도 이후 과제로 남겨 두겠다.

〈표 1〉 천황제에 관한 감정

	1973	1993	2013	2018
존경	33.3	20.5	34.2	41.0
호감	20.3	42.7	35.3	35.8
무감정	42.7	33.7	28.4	22.2
반감	2.2	1.5	0.5	0.2

출처: NHK 제10회 〈일본인 의식〉 조사(2018)에서 인용.

(〈표 1〉 참조).⁵⁰ 1970년대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지지율은 높아졌고, 천황제 문제를 발언하기 거북한 사회적 분위기를 읽어 낼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의식 문제로 여성 천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높아진다. 황위 계승에 성별로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히 성차별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논한 바와 같이 천황제라는 사회제도 자체가 성차별이나 이성애주의를 내포한 이상 여성도 동등하게 황위를 계승할 수 있게 되더라도, 잔존하고 오히려 재생산되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사회 근간에 존재해 온 통합원리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50 1993년 '호감'이 42.7%로 높았던 데에는 당시 황태자였던 나루히토가 오와다 마사코(小和田雅子)와 결혼하며 미디어를 통해 잦은 보도가 이루어졌던 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양지영(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이 번역하였다.

2001. 5.

松下圭一, 「大衆天皇制論」, 『中央公論』 74(5), 中央公論新社, 1959. 4.

茂木謙之介, 「改元の暴くもの: 大正末~昭和初期における女性皇族の表象をめぐって」, 『足利大学
研究集録』 54号, 2019.

森暢平, 「島宇宙を漂流する「象徴」: 〈眞子様萌え〉,そして「トス子」と」, 『世界』 792号, 2009. 6.

安田常雄, 「象徴天皇制と民衆意識: その思想的連関を中心に」, 『歴史学研究』 621号, 1991.

〈잡지〉

蓮實重彦, 「元号などというものは適当に無視しておけばよい」, 『新潮』 5月号, 2019.

秩父宮雍仁, 「東宮様の環境: 立太子式に寄せて」, 『改造』 12月号, 1952.

〈인터넷 자료〉

『朝日新聞デジタル』

『ITMediaNews』

『共同通信』

『産経新聞』

『時事通信』

『しんぶん赤旗』

『日刊ゲンダイDIGITAL』

『毎日新聞』

『リテラ(LITETA)』

Facebook, Twitter(現, X)

천황제와 성차별 · 이성애주의의 재생산: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의 증언을 향해

| 호리에 유리

遠藤正敬, 『戸籍と国籍の近現代史: 民族 血統 日本人』, 明石書店, 2013.

遠藤正敬, 『天皇と戸籍: 「日本」を映す鏡』, 筑摩書房, 2019.

大野光明, 「運動のダイナミズムをとらえる歴史実践: 社会運動史研究の位置と方法」, 『社会運動史
研究1: 運動史とは何か』, 新曜社, 2019.

小倉慈司·山口輝臣, 『天皇の歴史9: 天皇と宗教』, 講談社学術文庫, 2018.

加納実紀代, 『女性と天皇制』, 思想の科学社, 1979.

加納実紀代, 『天皇制とジェンダー』, インパクト出版会, 2002.

加納実紀代, 『「銃後史」をあるく』, インパクト出版会, 2018.

河西秀哉, 「戦前から揺れ動いてきた近代天皇: 『おことば』が突きつけた象徴の意味」, 『Journalism』,
第318号(2016年11月号), 朝日新聞社, 2016.

北原恵, 「表象の政治学: 正月新聞に見る〈天皇ご一家〉像の形成と表象」, 『現代思想』, 第29巻 第6号,
2001.

北原恵, 「国家の境界線上で 『皇室改革』という言説: 宮内庁ホームページに見る皇室表象」, 『現代思

- 想』第32卷 第7号, 2004.
- 北村小夜, 『慈愛による差別: 象徴天皇制 教育勅語 パラリンピック(新装増補版)』, 梨の木舎, 2020.
- 国際女性の地位協会, 「林陽子さんへのインタビュー: 女性差別撤廃委員会委員としての11年間の活動を振り返って」, 『国際女性』 第33号, 2019.
- 佐藤文明, 『戸籍うらがえ史考: 戸籍 外登制度の歴史と天皇制支配の差別構造』, 明石書店, 1988.
- 佐藤文明, 「象徴天皇制にとって戸籍とは何か」, 戸籍と天皇制研究会 編, 『戸籍解体講座』, 社会評論社, 1996.
- 鈴木裕子, 『天皇制「慰安婦」フェミニズム』, インパクト出版会, 2002.
- 鈴木裕子, 『フェミニズム 天皇制 歴史認識』, インパクト出版会, 2006.
- 鈴木裕子, 『天皇家の女たち: 古代から現代まで』, 社会評論社, 2019.
-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アイデンティティと欲望の政治学』, 岩波書店, 2002.
- 早川紀代, 『近代天皇制国家とジェンダー: 成立期のひとつのロジック』, 青木書店, 1998.
- 早川紀代, 『近代天皇制と国民国家: 両性関係を軸として』, 青木書店, 2005.
- 菱木政晴, 「宗教としての天皇制を考える」, 『季刊ピープルズ プラン』 第84号, 2019.
- 堀江有里, 『レズビアン アイデンティティーズ』, 洛北出版, 2015.
- 堀江有里, 「『国家と教会』論 再考: 天皇代替わり時代におけるキリスト教会の責任」, 『人権教育研究』 第28号, 2020a.
- 堀江有里, 「天皇制とキリスト教への一考察: 身分制度 性差別 異性愛主義」, 『キリスト教文化』 第15号, 2020b.
- 堀江有里, 「天皇制とジェンダー/セクシュアリティ: 国家のイデオロギー装置とクィアな読解可能性」, 菊地夏野・堀江有里・飯野由里子 編著, 『クィア スタディーズをひらく2: 結婚, 家族, 労働』, 晃洋書房, 2022.
- 安丸良夫, 『近代天皇像の形成』, 岩波学術文庫, 2007[1992].
- 若桑みどり, 『皇后の肖像: 昭憲皇太后の表象と女性の国民化』, 筑摩書房, 2001.

‘지속 가능한’ 천황가 서사와 시선의 권력:

‘마사코 황후’에 대한 대중의 판타지와 관음적 시선 | 박이진

- 가와이 하야오, 햇살과나무꾼 옮김, 『판타지 책을 읽는다』, 비룡소, 2006.
- 권숙인, 『젠더와 일본 사회』, 한울, 2016.
- 권숙인, 「전후 천황제와 젠더: 황태자비 마사코의 시련과 황실의 위기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9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 김경은·김갑숙, 「에곤 실례의 자화상 분석: 라캉의 응시 개념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5(1), 美術治療研究, 2018.
- 다울링, 콜레트, 이호민 옮김, 『신데렐라 콤플렉스』, 나라원, 2002.
- 라캉, 자크, 홍준기 외 옮김, 『에크리』, 새물결출판사, 2019.
- 매킨타이어, 리, 김재경 번역, 『포스트트루스-가짜 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두리반, 2019.
- 멀비, 로라, 이기형·이찬욱 옮김, 『1초에 24번 죽음』, 현실문화, 2007.
- 박규태, 『일본정신분석』, 이학사, 2018.

배경을 볼 때도, 전전의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천황을 규정하는 방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전후의 상징천황제하에서 천황의 직무 역시 단순히 비정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천황 아키히토의 오키노보라를 분석하면서 그가 스스로를 재현하는 신체성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그가 그의,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욕망을 재현/대표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한다. 그 결과로서 본 연구는 천황이 고령화하는 사회 속에서 고령화하는 신체를 넘어 제도로서 재생하는 신체를, 말하고 듣는 신체성을 통해 정동의 공동체를, 기도하고 움직이는 신체를 통해 일본국민의 통합과 일본국이라는 상징성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이처럼 천황 아키히토는 과거와 미래, 권위와 권력, 일본국의 상징과 국민통합의 상징, 국제와 테크노크라시라는 이중성을 재현하는데, 이는 헤이세이 시대 천황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상징'으로서의 천황제를 구성한다.

주제어: 아키히토, 천황, 오키노보라, 헤이세이, 상징, 대표

SNS 시대의 천황제: 약자 정치와 영성(spirituality)의 역할 | 모테기 겐노스케

본 논문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으로 침투한 2010년대 일본사회에서 천황과 황실을 둘러싼 미디어 표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9년 레이와 개원 전후로 일본정부는 황실의 인기를 이용했고, 그에 비해 황실은 정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아키히토 천황의 담화는 개원의 원활한 실시를 기대한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의도와 공범 관계를 맺었다. 또 아키히토 천황의 담화에 약자 정치와 영성에 관한 서사가 제시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여기에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넘어갈 때 소셜 미디어 담론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부분은 매스미디어에서 시작된 것으로 개원이라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넘쳐났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벗어난 잡음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소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천황제를 둘러싼 이야기 해석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제어: 천황(제), 미디어 표상, 소셜미디어(SNS), 개원, 내셔널리즘, 아키히토 천황, 약자 정치, 영성

천황제와 성차별·이성애주의의 재생산: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의 증언을 향해 | 호리에 유리

근대천황제는 일본사회의 성차별이라는 규범을 재생산하는 장치다. 그러나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상징천황제라는 국가체제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국가체제를 문제 삼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번의 황위계승을 통해 일본사회의 상황을 그려 낸 후에, 황위계승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이성애주의 문제를 밝혔다. 이미 일본 페미니즘에서는 천황제라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 제기 는 물론, 사람들의 의식과 관습에도 젠더 역할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성애주의라는 관점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성중심주의와 이성애주의 양쪽에서 타자화된 '레즈비언'이라는 위치성(positionality) 개념을 통한 잠정적인 분석도 제시해 둔다.

주제어: 상징천황제, 황위계승, 황실전법, 여성·여계천황, 반천황제운동, 가족국가관

'지속 가능한' 천황가 서사와 시선의 권력: '마사코 황후'에 대한 대중의 판타지와 관음적 시선 | 박이진

이 글은 상징천황제 이후 천황가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 변화를 '마사코'라는 기표를 통해 살펴보았

in that regard making him an accomplice to the government's intentions. It is also noteworthy how Emperor Akihito's address included references to underdog politics and spirituality.

Social media discourse played a role in the transition from the Heisei to the Reiwa era. Most of the discussions originated from mass media and contributed to the celebratory atmosphere, but it was also possible to observe some noise that strayed from such mood.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se subtle voices in order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understanding the narrative of the Japanese emperor system.

• **Keywords:** Emperor(System), Media Representation, Social Media(SNS), Change of the Era (改元), Nationalism, Emperor Akihito, Underdog Politics, Spirituality

The Emperor System and the Reproduc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Heterosexism: Toward the End of the Ideological Institution of the Japanese State | HORIE Yuri

The modern emperor system in Japan is an institution that reproduces the norms of sexism and heterosexism in Japanese society. However, most people living in Japan are so accustomed to the state system of the “symbolic emperor system”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even problematize it. This paper will first describe the situation in Japanese society during the two replacements of the emperor, and clarify the issues of sexism and heterosexism with regard to the imperial succession.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the emperor system itself, Japanese feminists have also pointed out the system's significant social impact on people's consciousness and resulting customs of gender roles. However, such discussions had failed to include the perspective of heterosexism. For this reason, this paper will hypothetically present an analysis from the positionality of “lesbian,” which has been othered by both male-centeredness and heterosexism.

• **Keywords:** Symbolic Emperor System, Imperial Succession, Imperial Household Law, Matrilineal/Woman Emperor, Anti-Emperorship Movement, Family-State Ideology

The Power of the Sustainable Emperor's 'Narrative' and 'Gaze': The Public's Fantasy and Voyeuristic Gaze on Empress Masako | PARK Yi-Jin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Imperial Family after the symbolic emperor system through the 'Masako' label. The media system, which has made the Emperors an object of commercialization and consumption, has amplified public interest in and scrutiny of the Emperors. This public interest may be meaningful as a method of communication with the Imperial Family, despite the change in information preferences. However, the tendency of the public to judge the character and personality of the Empress based on her 'created' historicity and 'contradictory' moralistic narrative is the result of their consuming of her personal identity in fragments.

The 'Empress Masako narrative' is characterized as a popular fantasy with a playful character in which the public 'gazing' at her continually creates a fantasy world. In this fantasy